



주간통일정세 2010-16(2010.04.12~04.1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1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일성 생일 ‘태양절’ 임박…축제 열기 고조(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대명절 ‘태양절’이라 불리는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4.15)이 사흘 앞으로 다가와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 통신은 1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도·시·군별 경연을 거친 예술단체, 예술선전대, 해외동포 대표 등 70여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19일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음을 알림.
- 또한 제23차 ‘만경대상’ 마라톤 대회가 중국, 케냐 등 8개국 선수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날 평양서 펼쳐졌고, 앞서 7~8일 평양에서 열린 ‘명절 요리축전’에는 43개 단체가 1천여 점의 전통 음식과 요리, 200여 건의 연구자료를 출품
- 평양의 보통강식료공장은 ‘태양절’에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탕, 과자, 강정 등 당과류 생산을 2배로 늘렸고, ‘태양절기념 영화상영 순간(旬間)’ 행사가 9일 평양과 각 도에서 열흘 일정으로 시작돼 ‘조선의 별’ 등 김 주석 추모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고 북한 언론은 전함.
- 이 밖에 김 주석 우상화 꽃인 ‘김일성화’를 개인, 단체별로 출품하는 12차 ‘김일성화 축전’이 13일 1주일 일정으로 개막될 예정이고, 이달 초부터 김 주석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 주변에는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이 몰려들어 나무와 꽃관목들을 기념식수하고 있음.

● 北김정일, 김일성대 전자도서관 현지지도(4/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교인 김일성종합대학교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새벽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은 새로 만들어진 김일성대 전자도서관의 시설을 둘러보고 “우리 대학생들은 나라의 보배인 만큼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힘.
- 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종합대학이 만년대계로 물려줄 민족 번영의 귀중한 재부라면서 대학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최태복·김기남 비서와 김경희 경공업부장, 장성택 행정부장, 김영일 국제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군부대 종합훈련 참관(4/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4.15)을 앞두고 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의 종합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김정일 동지는 전망대에 올라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훈련을 봤다”며 “(김 위원장은) 인민 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소개했으나 ‘과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훈련 상황에 대해 “시작 구령이 내려지자 각종 지상포들이 목표물에 강력한 화력 타격을 개시했고 줄지어 쏟아지는 불소나기로 적진은 삼시에 산산조각나고 불바다로 화했다”면서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무적의 군력으로 일격에 쓸어버리고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수호할 인민군 군인들의 결심과 타격력을 잘 보여줬다”고 소개
-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차수와 전병호·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가 동행

● 北, 軍장성 100명 승진인사…97년 이후 최대(4/14, 연합뉴스)

- 故 김일성 생일(4.15)을 하루 앞두고 대장 4명을 포함해 군 장성 100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진행
- 작년 4월 김원홍 인민군 보위사령관 단 1명을 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모두 54명의 군 장성에 대해 승진인사를 했고, 2008년 4월에는 대장과 상장 승진자 없이 강국중 등 2명을 중장으로, 최광준 등 33명을 소장으로 승진시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을 맞아 최고인민사령관 자격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 데 대한 명령 제0045호’를 하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장 승진자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남한의 국가정보원) 수석부부장 겸 국방위원, 리병철 공군사령관, 정명도 해군사령관, 정호균 전 포병사령관 4명이었는데, 특히 우동측은 작년 4월 군 장성 인사 때 상장으로 승진한 후 다시 1년 만에 대장에 올랐음.
- 이밖에 최경성, 최상려, 한창순, 전창복, 오철산 5명이 상장(남한의 국가정보원 중장)으로, 리주홍, 김수길 등 8명이 중장(남한의 국가정보원 소장)으로, 함룡철, 손경복 등 83명이 소장(남한의 국



가정보원 준장)으로 승진했다고 통신을 밝힘.

● **北김정일, ‘자기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보라’(4/1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4일 준공식을 가진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친필 명제’를 보냄.
- 또한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 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는 명제도 전달함.
- 준공식에 참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명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은) 친필명제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
- 통신은 “(김일성대의) 전자도서관은 여러 개의 열람홀과 정보봉사홀, 컴퓨터교육실과 원격강의실, 다매체열람실, 종합강의실과 학술교류실, 정보기술연구실 등을 갖추고 각종 최신식 전자설비로 장비되어있다”고 밝혔으며 “목록검색부터 도서 및 자료열람, 강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와 망체계(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된다”며 “전자도서관이 일떠섬으로써 대학은 온 나라에 대한 사회과학 및 기초과학의 원격교육과 정보봉사중심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임.

● **北김영남 “인민생활 향상 총공세 벌여야”(4/14,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故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4.15)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국가적인 총공세를 벌여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되게 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수령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것은 성스러운 투쟁”, “당의 경공업혁명 방침과 농업혁명 방침을 관철해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키며, 인민생활과 관련한 부문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고 주문
- 또한 또 “지금 조선반도(한반도)에서는 미제와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모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의 앞길에 극히 엄중한 장애와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
- 대외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



의 자주화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보고대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김영일 내각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병호·김기남·최태복·김중린·김국태 당 중앙위 비서,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로두철·오수용 내각 부총리,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인사들이 모두 참석

● 北 ‘4.15전야’ 또 불꽃놀이…후계자 치적 쌓기(4/15, 연합뉴스)

- 북한은 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 기념행사를 매우 성대하게 벌이고 있으며, 특히 14일 밤 평양 도심 대동강변의 주체사상탑 주변에서 펼쳐진 ‘축포야회’(불꽃놀이) 행사가 눈에 띈.
- 축포야회 행사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연설을 통해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신 행운을 지닌 것으로 하여 오늘과 같은 희망의 축포를 터져 올릴 수 있으며, 주체혁명 위업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RFA는 15일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앞두고 생활물자 주문이 몰려 북중 접경 도시에서 북한을 상대로 장사하는 중국 상인들이 모처럼 바빠졌다”고 전함.

● 어둠속 김일성 98회 생일(4/17, 브라질 언론; 연합뉴스)

- 브라질 유력 일간지 폴라 데 상파울루가 16일자에서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을 맞아 평양 시내에서 벌어진 축제 행사를 소개
-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사망한 고 김 주석의 98회 생일을 맞아 15일 밤부터 1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축하 행사에 참가
- 평양 시내 곳곳에서 불꽃놀이와 공연 등의 행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현지에 파견된 이 신문사의 기자는 3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볼 수 있었으나 북한 당국의 제지로 사진촬영을 하지는 못함.

● 北김정일, 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4/17, 조선중앙통신)

- 인민보안부 격상 및 ‘인민경비대→인민내무군’ 명칭 변경 확인
-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소품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이날 공연 관람에 동행한 주상성 대장을 ‘인민보안부장’이라고 호칭해 인민보안성이 인민보안부로 격상됐음을 확인했고, 협주단의 소속으로 ‘인민내무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민경비대’의 명칭이 바뀌었음을 보여줌.
- 주상성 국방위원 겸 인민보안부장을 비롯해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올해 두 번째 희천발전소 현지지도(4/17, 조선중앙통신)

- 올해 첫 현지지도 장소로 택했던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다시 찾았다고 보도
- 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발전소 건설 실태를 파악한 다음 인민군 제210부대의 조압수조 공사장을 찾았으며 “석수가 떨어지는 지하 막장에 친히 들어가 구슬땀을 바치는 전투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함.
- 노동당의 김경희 경공업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 주규창(군수공업부)·리제강(조직지도부)·리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 인민군 대장,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

● 北김정일, ‘양대 공안기관’ 공연 연이틀 관람(4/18, 조선중앙통신)

- 우동측 보위부 수석부부장(국방위원 겸직)의 수행을 받아 인민군 제10215부대(보위부의 대외 명칭)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했고, 전날인 17일에는 김 위원장이 보안부 산하 인민내무군 협주단의 소품 공연을 봤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연관람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하루 뒤 보도하는 북한 매체의 관행으로 미뤄 두 기관의 공연을 16일(보안부)과 17일(보위부)에 본 것으로 추정
- 일례로 보안부는 이달 초순 종전의 ‘인민보안성’에서 조직 명칭을 바꾸고, 인민무력부·보위부와 함께 국방위 직속의 ‘3대 권력기관’으로 재편됐고, 보위부의 실질적 수장인 우동측 수석부부장은 지난 14일 북한군 장성 인사에서 상장(중장) 승진 1년 만에 대장을 달았음.
- 김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보위부(중앙통신 보도날짜 17일)와 보안부(# 21일) 공연을 잇따라 관람
- 이번 보위부 선전대 공연에는 김원홍 인민군 보위사령관, 현철해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동향

- 4/13 김정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 현지지도(4/13, 중통)
 - 최태복·김기남(黨비서), 김경희·장성택·김영일·김양건(黨부장) 등 동행 및 성자립(총장), 김태희(대학 黨위원회 책임비서) 영접
- 4/14 김정일, 태양절 즈음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67대연합부대 종합



훈련 참관(4/14, 중통)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리용무·오극렬(국방총 부위원장), 리영호(軍 총참모장), 김정각(軍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軍 차수), 전병호·최태복·김기남(黨 비서) 등 동행
- 4/14 김정일, 태양절 즈음 일본돈 1억 8,402만 7,390 ¥ 총련 자녀들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전달(4/14, 중통)
- 김일성과 김정일의 총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156차에 걸쳐 일본돈 465억 9,425만 390 ¥에 달함
- 4/14 김정일, 4/14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제0045호 下達(4/14, 중통)
- 4/15 김정일, 「태양절」음악회 관람 및 黨 名義 「감사」전달(4/15, 중통)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軍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軍 총참모장), 김일철(軍 차수), 최태복·김기남(黨 비서), 김경희·장성택(黨 부장) 등 동행 관람
- 4/17 김정일, 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4/17, 중통)
- 주상성 국방위원 겸 인민보안부장을 비롯해 리병삼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동행
- 4/17 김정일,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 제210부대의 조압수조 공사장 현지지도(4/17, 중통)
- 노동당의 김경희 경공업부장과 장성택 행정부장, 주규창(군수공업부)·리제강(조직지도부)·리재일(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현철해·리명수 인민군 대장,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등이 동행
- 4/16, 17 김정일, 김일성생일 직후 보안부·보위부 잇따라 공연 관람(4/18,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선군영도를 받들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진행(4/12, 중통)
- 김중린(黨비서), 이용철(청년동맹 1비서) 등 참가
- 「제12차 김일성화(花)축전」김정일화 전시관에서 개막(4/12, 중방)
- 양형섭·김기남·안동춘(문화상/개막사)·와르디 야뜨모(단장/축하연설) 등 참가

나. 경제

● 北방송, 中관광단 일정 상세히 전해(4/1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방송은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 주산중(祝善忠)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 참관단과 관광방문단이 평양의 만경대(김일성생가), 김일성화(花)축전장, 개선문, 당창건 기념탑, 북중친선 ‘우의탑’과 남포시의 서해감문, 환문점 등을 방문했다고 전함.



- 중국 측 관광단은 또 고 김일성 주석 생일 전날인 14일 평양 도심 대동강변의 주체사상탑 주변에서 펼쳐진 ‘축포야회’(불꽃놀이)를 본 뒤 북한 예술단의 ‘홍루몽’ 공연을 관람했고, 15일에는 김 주석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연 환영 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총 395명으로 구성된 중국 측 참관단과 관광단은 지난 12~13일 항공편과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주산중 부국장과 평양 공항에 출영 나온 강철수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은 연설을 통해 “(중국 관광단의) 이번 조선 방문이 두 나라 관광 부문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 중국 관광단의 이번 북한 방문은 작년 10월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양국 관광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뤄진 것임.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축선충(祝善忠) 국가여유(관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친선참관단 및 관광부문 방문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평양 시내 반미 선전화 철거(4/16, 교도통신)

외화 상점에는 외화전용 계산대 등장

- 북한 평양 시내 중심가에 걸려 있던 대형 반미 선전용 그림이 ‘인민 생활 향상’을 호소하는 선전화로 바뀌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평양발로 보도
- 한편 평양 시내 외화 상점에 외화전용 계산대가 등장했고 상품에 표시된 북한 원화 가격을 달러나 엔화로 자동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당시 사용이 금지된 외화가 다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

● 北, 8개 도시 인프라 개발 계획 을 착수(4/16, 교도통신; 연합뉴스)

- 평양과 남포, 라선, 원산 등 8개 도시에 5년간 1천200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개발하는 계획을 올해 착수했다고 북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 박철수 총재가 밝힘.
- 박 총재는 이날 평양에서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개발 프로젝트는 경제 재건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힘.
- 이번 개발 계획이 적용되는 도시는 평양, 남포, 함흥, 원산, 김책, 청진, 신의주, 라선 등 8개 도시



■ 기타 (대내 경제)

- 국가과학원 채굴기계연구소 과학자들, 신형 ‘공기기동식부선기’ 완성 (4/13, 중통)
 - 저품위광석, 미광석에 함유된 유가광물을 말끔히 회수하고 높은 선광실수율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력발전소연재의 부유선별공정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철생산 기지들의 선철·강철증산(4/13, 중통)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공업총생산액 108.7%, 선철 101.9%, 강철 102.1%, 압연강재 103.6% 계획초과 및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강철생산기지들의 1/4분기 철강재 증산선전
-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컴퓨터실 청년기술자들, 수송관계프로그램 개발 도입(4/14, 중방)

다. 사회·문화

● 北김일성 생일 ‘충성자금’ 어떻게 만들어질까?(4/15, 데일리NK)

- 데일리NK는 올해 98회를 맞은 김일성 생일에 맞춰 북한 인민군 외화벌이 기관에서 일했던 탈북자의 증언을 정리해, 북한의 ‘충성자금’ 어떻게 걷어지는지에 대해 전함.
- 통신은 “많은 공군기지들이 충성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얼음’(북한산 마약) 장사 같은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는데, 곳에 따라 전체 인원의 절반 가량이 얼음장사에 동원되기도 한다”면서 “보위부나 보안부 단속에 걸려도 뇌물을 주면 무마될 수 있고, 심지어 단속기관이 마약을 파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최근 인천 강화군의 ‘구제역’ 발생 인용 보도(4/12, 중방)
- 개건된 조선미술박물관 개관식 진행(4/12, 중방)
 - 안동춘(문화상/개막사) 등 참가
- 태양절 기념 전국 대학생 농구경기대회, 4/5~12 平南 평성시에서 진행(4/13, 중통)
- ‘제2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4/12-13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첫 공연과 제2일 공연 진행 등 「태양절」기념 對內행사 동향 보도(4/13-14, 중통 등)
 - 중앙미술전시회,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안동춘(문화상/개막사) 등 참가하 개막식 진행 및 송화미술전람회도 개막(4/13, 중통)
 - 「여맹」원들의 태양절 기념무대(위대한 장군님 모시어 태양의 노래는 영원합니다), 개성관광장에서 김종린(黨비서)·노성실(여맹위원장) 등 참가하 진행(4/13, 중방)
 - 駐北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 4/13 제12차 김일성화 축전장 관람(4/13, 중통)



- 민주공고 노동계시민협회, 김일성·김정일에게 ‘노동계최고상’ 전달 (4/13, 중통)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태양절 기념 맹세모임, 만수대언덕 김일성동상 앞에서 김중린(黨비서)·최수동(직총 부위원장/보고) 등 참가 下 진행(4/14, 중방)

2. 대외

가. 일반

- 北신문 ‘100% 자체 경수로 건설 목격할 것’(4/12, 조선중앙통신)
 - 신문은 ‘허황한 급변사태의 본질’이라는 논평에서,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사시 북한 핵 무기 제거’라는 요지의 미 태평양 해병대사령관 키스 스텔더 중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경제 제재, 심리모략전 등 반공화국책동과 대 조선(북한)정책의 방향이 급변사태 조성을 통한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제도 통일’로 지향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스텔더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급변사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들이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망상적인 급변사태론에 환장이 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강성대국’ 승리의 대사변이 급변사태론의 종말을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소말리아해적 ‘다당제’탓(4/12, 연합뉴스)
 - 월간 대중잡지 ‘천리마’ 최근호(2010.3)가 ‘해적은 다당제가 불러온 것이다’라는 글에서 국제적 해상통로인 소말리아 해역이 해적행위로 인해 공포와 불안을 몰고 오는 ‘악마의 해역’으로 변했다면서 “소말리아가 이런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든 것은 미국 등 서방세력이 내려 먹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후과(결과)”라고 주장
 - 잡지는 특히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하고 소말리아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조롱한 뒤 “서방식 ‘민주주의’야말로 온갖 사회악의 근원”이라고 비판함.
- 北최고인민회의 -내각, 폴란드 대사관서 조의(4/13,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외무성, 육해운성, 무역성·교육성, 문화성,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외교단사업국 일꾼이 폴란드 대통령 레흐 카친스키와 그의 부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13일



주조 폴란드 대사관을 찾아 조의를 표시했다”고 밝힘.

- 이어 “참가자들은 고인들의 사진 앞에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묵상했다”며 “그들은 조의록에 글을 남겼다”고 덧붙임.

● 北 리철 후임 서세평 대사, 제네바 부임(4/15,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리철 전 스위스 주재 대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서세평 대사가 제네바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
- 서 대사는 북한의 최대 명절로, ‘태양절’이라 불리는 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4.15)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저녁 연인원 100명 안팎의 제네바 주재 외교사절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축하 리셉션을 연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인용해 “스위스 연방 주재 조선 특명전권대사로 서세평이 임명됐다”고 전한바 있음.

● 北, 주중대사 교체 공식확인(4/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0년부터 10년간 중국 주재 대사를 지낸 최진수 대사의 교체 사실을 공식 매체를 통해 처음 확인
- 지난 13일 최진수 대사가 ‘작별인사’를 위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만났다고 보도
- 그러나 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는 아직 최진수 대사의 후임이 누구로 결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북한은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주중 대사로 파견하던 오랜 관행을 깨고 최근 최진수 대사의 후임으로 최병관 전 외무성 영사국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짐.

● 北 “고교무상화 제외는 심각한 민족차별”(4/18, 교도통신)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가 일본 정부가 제일 조선학교(조총련계 학교)를 고교 학비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민족차별이라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평양발로 보도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4/11 폴란드 대통령 일행의 비행기 추락 사망사고 관련 同國 국회의원 의장(‘브로니스와브 꼬모롭스끼’)에게 위문전문(4/12,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및 외무성·육해운성·무역성·교육성·문화성·대외문화연락처·외교단사업국 일꾼들, 駐北 폴란드 대사관 弔意 방문(4/13, 중통)
- 駐北 시리아 대사, 4/13 박의춘(외무상)·리용남(무역상)·리영철(黨부부장)·김형준(외무성 부상)·문재철(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문성모



(외교단사업국장) 등 초청下 태양절 및 自國 독립절 즈음 연회 개최 (4/13, 평방)

- 인도네시아 정부문화 대표단, 4/13 귀국(4/13, 평방)
- 독일 연방의회 의원 대표단, 4/14 방북일정 마치고 귀국(4/14, 중통)
- 김영남과 김영일, 4/15 中 强震 관련 호금도와 온가보에게 위문 전문 (4/15, 중통)

3. 대남

● 北 ‘남북경협 안 풀리면 개성공단 폐쇄’(4/13, 연합뉴스)

-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경색국면에 들어간 남북경협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국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강경조치에 이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힘.
- 북한이 진전을 기대하는 남북경협 사업에는 ‘평양에 주택 10만호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건설 이외에 ▲민속촌건설(대성산 기슭) ▲ 평양 근교에 있는 평성 IT단지 건설 등이 포함돼있고 올해 사업비로 3억2천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 北 천안함 사건 南자작극 선전(4/16, 열린북한방송)

- 북한이 내부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남한의 자작극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소식통의 전언 인용, “북한 당국은 최근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천안함 사건은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자신들의 대북적대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모략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교양을 했다”고 밝힘.
- 강연에서는 “구태의연한 대북대결정책을 고집하면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남한 정권이 이번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한반도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소식통은 전함.
- 또한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천안함 사건을 내부체제결속을 위한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우리는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도발책동에 경각성을 높이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체제결속 선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신문, ‘그랜드 바겐’ 비난(4/1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남조선 당국의 이른바 그랜드 바겐을 평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궤변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아무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할 내용을 단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핵 위기 해소에 필수불가결한 미군철수, 합동군사연습 중지, 조미평화협정 같은 것을 어떻게 통합적 접근법으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가”라고 반문
- 신문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남조선, 일본, 태평양 등지에 수만 개의 전략·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우리 공화국을 겨누는 상황에서 공화국이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갖춘 것은 당연하다”며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되풀이

● 北 “천안함 ‘북 관련설’ 날조”…첫 입장표명(4/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7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며 북한이 관련됐다는 주장은 ‘날조’라는 공식 입장을 밝힘.
- 북한 군사논평원은 이날 발표한 글에서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광들과 우익 보수정객들은 침몰 원인을 규명할 수 없게 되자 불상사를 우리와 연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논평원은 “역적패당은 최근 외부 폭발이 어뢰에 의해 일어났고 그 어뢰는 우리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에 의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북 관련설’을 날조하여 유폐시키고 있다”고 비난
- “제 입으로 함선 침몰 원인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근거를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공언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북 관련설’을 내들리는 가소로운 처사를 두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며 그동안 천안함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킨 배경을 설명
- 그러나 논평원은 ‘북 관련설’이 날조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는 않았음.
- “비록 침몰한 함선이 남측 군함이지만 술한 실종자와 구조된 인원들이 동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유감스러운 불상사로 간주해 왔다”고 강조
-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언제나 높은 경각성을 갖고 벌어지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함.



● **北, 주민들에게도 천안함 소식 알려(4/1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17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북한이 이를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전함.
- 천안함 사고를 북한과 연계시키는 것이 ‘날조’라는 북한의 주장은 이날 오후 1시5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 보도
- 이어 대내용 라디오 조선중앙방송과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이 오후 3시 보도에서 동시에 이 소식을 전한데 이어 오후 5시 반복 보도
- 특히 북한 전 지역에서 시청되는 조선중앙TV는 오후 5시에 이어 오후 8시 보도시간에 같은 내용을 내보냄.
- 보통 북한은 주민 사상교양에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대남·대외용 입장 발표에 한해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중앙통신이나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만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에는 중앙TV 등을 통해 전 주민에게 천안함 소식을 전면 공개
- 북한 내부에 ‘소식통’을 두고 있는 대북매체들에 따르면 천안함 사고 이후 북한 주민들도 중국을 통해 천안함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과 남한의 모략 또는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함.
-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남한에서 이번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의심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알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남한의 정보과학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들키지 않고 잘했다’고 하기도 한다”고 전함.
-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같은 날 “북한군내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쉬쉬하면서도 ‘한방 깔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주장
- 대북 단파 라디오 ‘열린북한방송’은 16일 북한 당국이 최근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천안함 사건은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자신들의 대북적대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모략자작극이라는 내용의 교양을 했다고 함.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지난 7일 인민무력부가 “미제와 남조선 군부세력들이 저들의 함선이 바다에 수장된 것을 우리 공화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는 요지의 지시문을 전군에 내려 보냈다고 전함.

● **대북방송 소속 탈북자 출신 국민 납북(4/17, 연합뉴스)**

-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단파 라디오인 ‘자유북한방송’ 소속 탈북자가 북중 국경에서 북한 당국에 붙잡혀간 것으로 자유북한



- 방송 김성민 대표는 北내부소식통 인용해 주장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월 26일 “불법 입국한 4명의 남조선 주민을 관계기관이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억류 중이라는 남한 주민의 신원과 입북 경위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이어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이 관련된 대북 매체와 단체를 거론하며 “앞으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첫째 가는 처단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천안함 변수’속 6자회담 재개 난기류>(4/16)

- 천안함 침몰사고의 후폭풍 속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이 난기류에 휩싸이는 형국임. 사고원인이 어뢰 등 외부폭발로 가닥을 잡으면서 6자회담 재개의 핵심 열쇠를 쥔 북한의 연루 개연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 물론 천안함 침몰사고와 6자회담 재개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두 사안 모두 북한의 진정한 태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최종적인 원인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교섭 움직임이 ‘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임.
- 정부 핵심당국자는 16일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마저도 아무런 행보 없이 천안함 침몰 사고 조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라고 말했음.
- 이 같은 신중한 기류는 미국에서 두드러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시점에서 천안함을 인양하고 함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6자회담 재개 논의는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이 규명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기류로 돌아서고 있음.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신호탄으로 여겨졌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벤트가 성사되더라도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음.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중국 쪽 분위기를 보면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에도 6자회담이 열린다고 보기 힘들고, 방중과 6자회담 재개가 연결되는 것으로 직접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음. 다만 북한의 연루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천안함 사고 조사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참가국들의 노력에 재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음.
- 단순히 불확실성만으로 6자회담의 교착국면을 지속시키기 보다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는 게 더욱 유익하다는 판단에서임.
-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연루 여부가 불확실하고 조사가 장기화



- 할 것이라는 1차적인 조사 결과 발표가 있다면 한·미 양국도 다른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할 요인이 생길 것”이라며 “특히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국면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이번 사고 조사를 맡은 민군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어서 당분간 6자회담 재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임.
 - 다른 소식통은 “6자회담은 천안함 사태와 맞물려 당분간은 난기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악의 경우 북한의 도발에 따른 결과로 밝혀진다면 6자회담은 상당 기간의 교착 국면을 거친 뒤에야 결국 대화 모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北, 단순한 회담복귀는 안 돼”(4/15)

- 앨런 타우셔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14일 “우리는 북한에 대해 단순히 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비핵화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우셔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미국과 제재가 없는 정상화된 관계를 원한다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우셔 차관은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지니고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 제임스 밀러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은 최근 발표된 ‘핵태세 점검(NPR)’ 보고서에서 핵사용 배제대상에서 북한과 이란을 예외로 남겨둔 이유는 이들 국가가 국제적인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 밀러 부차관은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들이 우리의 우방에 대해 핵무기 공격은 물론 재래식 및 생·화학 공격을 가했을 때도 미국은 여전히 핵무기를 사용할 여지가 있다”면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언급했듯이 모든 옵션이 선택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6자회담 재개전망 ‘가시권→불투명’ 전환>(4/15)

- 4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북핵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난기류 속에 빠져들고 있음.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북한 관련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미 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도 사실상 중단됐다.
-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중래에도 회담재개에 대한 분명한 그림은 없었지만, 지금은 특



- 별한 움직임이 없다”면서 “회담 전망을 단기간에 점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기돼 왔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뤄질 경우 6자회담 재개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방중을 하더라도 북미 간 추가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김정일 방중이 회담 재개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브레이크를 걸었음.
- 사실 천안함 사건이 나기 이전만 하더라도 6자회담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왔음. 2월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에 추가 대화를 가진 뒤 6자회담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 로지컬하다”면서 “(6자회담 재개 시기는) 3~4월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음.
 - 지난달 말에는 북한이 북미 추가접촉을 조건으로 6자회담 예비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을 더욱 확산시켰음.
 - 낙관적이던 6자회담 재개전망이 불투명하게 바뀐 것은 천안함 사건 때문으로 보임.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각종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음. 북한 어뢰설 등 북한 관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워싱턴을 방문해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협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임.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토의했다”면서 “다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음.
 - 우리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건이 만의 하나 북한의 어뢰공격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임.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했다는데 6자회담이 진행된다면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음. 그는 “6자회담을 한번 하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도 했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지, 회담 개최여부가 아니라는 것임.
 - 문제는 북한의 움직임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은 6자회담에 대해 미국의 체면을 지켜주고, 중국을 내세워 비핵화회담 재개를 청탁해온데 대해 적절한 회답을 줬다”고 최근 보도했음.
 - 이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나름대로의 양보를 했음을 시사하면서 북미 접촉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북한은 만일 북미 간 추가 접촉이 이러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질 경우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발사나 극단적으로 제3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임.



● “美, 사이버공격 대북조치 변수 안 돼”(4/14)

-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에 조치를 취할 때 사이버 전쟁 변수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음. 케이스 알렉산더 미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내정자는 15일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될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 앞서 이날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알렉산더 사령관 내정자는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알렉산더 내정자는 미국의 인프라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반격을 감행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北, 핵 실험 후 방사능물질 봉쇄기술 가졌을 수도”(4/13)

- 북한이 핵 실험시 발생하는 크립톤, 크세논 같은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봉쇄하는 기술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음.
-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같은 가능성을 제기한 뒤 이런 가정이 사실일 경우 북한이 이란 등의 핵실험을 유치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음.
- CRS 보고서는 “유엔 산하 국제자료종합센터(IDC)는 작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의 99.9% 이상이 유출 봉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1차 핵실험(2006.10)에서 얻은 교훈과 비밀 해제된 미국의 핵실험 경험을 이용해 방사능 물질을 봉쇄했을 수 있다”면서 “고출력 장비를 사용했거나 방사능 물질의 방출량을 검출 가능치 이하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보고서는 그러나 “핵실험을 가장한 비핵 폭발실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한 차례 실험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서 북한의 봉쇄 능력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 실험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란의 핵실험 유치를 거론한 이유로 “지진파 등을 통해 폭발실험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그 같은 핵실험을 했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VOA는 전했다.



● “전직 美관리들, 北핵기술 제3국 이전 우려” <RFA>(4/13)

-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북한 핵기술의 ‘제3국’ 이전 가능성을 잇따라 제기해 주목됨.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그레고리 솔츠씨는 최근 미국의 한 군축 관련 단체와 회견에서 “북한과 시리아 사이의 핵협력 의혹은, 북한이 미사일과 다른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기술까지 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핵기술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나라라면 어디에나 핵기술을 이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 RFA에 따르면 솔츠 전 대사는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팔려 했다면 다른 나라에도 핵기술을 이전하려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며 미안마, 베네수엘라 등을 그 대상으로 언급했음. 그는 또 “2007년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 의혹이 불거졌을 때 IAEA 사찰관들은 시리아가 원자로 건설 기술이나 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며 무시하는 분위기였다”면서 “하지만 북한에서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곧 상황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현 맥아더재단 회장)은 12일(현지시간) RFA와 인터뷰에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기술과 물질을 외부에 확산하지 않으리란 환상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시리아에서 원자로를 건설한 사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단체나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음.
-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주역이기도 한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시리아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원자로를 비밀리에 건설했음에도 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았다”며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기술이나 핵물질을 테러리스트 등 제3자나 다른 나라로 확산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 공군은 2007년 전투기 편대를 동원, 시리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알카바르 사막에 건설 중이던 핵 관련 추정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음.

● <美, 北 핵보유 간주·핵보유국 인정은 거부>(4/12)

-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음. 그동안 북한에 대해 ‘핵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핵장치를 갖고 있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명확하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9일 켄터키주 루이빌대학에서 핵비확산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 다고 말하면서 이런 기류는 더욱 분명해 졌음.
- 클린턴 장관은 이틀 뒤인 11일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 능력과 관련,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로 분명히 구별했음. 그는 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열린 G8(주요8개국) 외무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이미 핵무기들을 가진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는 클린턴 장관의 일련의 언급이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의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이 실질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임. 북한의 핵능력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언론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
 -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번 회의에 전세계 9개의 핵보유국 중 8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만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회의 참여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 미국은 그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음.
 - 데니스 블레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월 “김정일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결국 미국은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경우 군사적 측면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국제외교적 측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나. 미·북 관계

● “평양 시내 반미 선전화 철거”<교도>(4/16)

- 북한 평양 시내 중심가에 걸려 있던 대형 반미 선전용 그림이 ‘인민 생활 향상’을 호소하는 선전화로 바뀌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평양발로 보도했음.
- 통신은 반미 선전화 철거가 “북한이 오바마 정권에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미 선전화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내걸려 있던 것임.
- 한편 평양 시내 외화 상점에 외화전용 계산대가 등장했고 상품에



표시된 북한 원화 가격을 달러나 엔화로 자동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당시 사용이 금지된 외화가 다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음. 바코드 시스템은 1달러를 북한 돈 100원, 1엔을 0.9원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北에 6자회담 복귀 촉구(4/1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등의 압박을 느끼고, 그래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이틀간 개최됐던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심각한 고립의 길을 선택해 왔다”며 이같이 촉구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별다른 효험이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제재는 요술지팡이가 아니지만,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취한 접근방법은 그들의 핵실험에 아무런 상응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한 것보다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낼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대북 제재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낼 것이라는 정책적 신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유엔의 강력한 제재가 유용하다는 입장임.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이어 폐막 회견에서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이 2년 후에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기로 합의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음.
- 또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첫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핵물질을 테러리스트 그룹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핵물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노력은 일과성이어서는 안되고 진지하고도 지속적인 전 지구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핵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음.

● 게이츠 “北·이란에는 모든 게 무효”(4/12)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북한과 이란을 유사시 미국의 핵공격 대상 지역에서 배제하지 않은 미국의 핵대세검토(NPR) 보고서와 관련,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이날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과 이란이 미국의 핵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들이 NPT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모든 게 무효”라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 게이츠 장관 및 이날 함께 출연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서명 및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이 핵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북한과 이란을 고립시키는 벅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게이츠 장관은 지난 6일 NPR 발표 뒤 가진 브리핑에서 “NPR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NPT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다. 중·북 관계

● “北 김정일, 이달 말 방중 가능성”<아사히>(4/18)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말께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베이징발로 보도했음.
- 아사히신문은 중국과 북한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를 맡고 있는 최고책임자인 북한 노동당 간부가 이달 상순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김 국방위원장의 방중 일정과 회담 내용에 대해 최종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신문은 김 국방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식량을 포함한 경제원조를 중국에 요청하는 한편 중국이 제안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예비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음. 북한의 식량사정은 5월 말께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말의 디노미네이션의 실패도 경제난을 가중하고 있음.
- 신문은 이어 지난 8일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노동당 간부는 김 국방위원장과 가족을 경호하는 호위총국 외에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를 총괄하고 있으며, 김 국방위원장의 일정과 생활물자 조달에 관여하고 있는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보도했음.
-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이 노동당 간부는 중국의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김 국방위원장의 방중 기간, 구체적 일정, 시찰 장소 등에 관해 논의했음. 2000년 이후 있었던 과거 4차례의 김 국방위원장 방중 때도 약 2주~10일 전에 경호책임자가 베이징을 방문해 사전협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음.
- 김 국방위원장의 방중 사전 협의팀에는 김 국방위원장의 통역을 맡고 있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의 김성남 부부장도 동행했음. 중국 유학 경력이 있는 김 부부장은 중국 공산당과의 친분이 두터



워 과거 고(故) 김일성 주석과 김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했었음.

- 신문은 그러나 김 국방위원장이 앓고 있는 신부전증의 증세를 감안해 방중 일정이 최종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북한 측은 경비문제 등을 이유로 김 국방위원장의 비밀 방문을 원하고 있어, 외국 언론의 주목을 피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北, 주중대사 교체 공식 확인(4/17)

- 북한이 2000년부터 10년간 중국 주재 대사를 지낸 최진수 대사의 교체 사실을 공식 매체를 통해 처음 확인했음.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최진수 대사가 ‘작별인사’를 위해 원자마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만났다고 17일 보도했음. 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조 친선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중앙통신은 원 총리가 “작년 (북한) 방문을 통해 조선이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것을 목격했다”며 “조선 인민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 매체는 아직 최진수 대사의 후임이 누구로 결정됐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북한은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주중 대사로 파견하던 오랜 관행을 깨고 최근 최진수 대사의 후임으로 최병관 전 외무성 영사국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방송, 中관광단 일정 상세히 전해(4/16)

- 북한의 금강산 자산 동결 직후 방북해 주목받았던 중국 단체관광단이 평양 일원과 판문점을 둘러봤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6일 전했다.
-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 주산중(祝善忠)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 참관단과 관광방문단이 평양의 만경대(김일성 생가), 김일성화(花)축전장, 개선문, 당창건 기념탑, 북중친선 ‘우의탑’과 남포시의 서해갑문, 판문점 등을 방문했다고 이 방송은 말했다.
- 중국 측 관광단은 또 고 김일성 주석 생일 전날인 14일 평양 도심 대동강변의 주체사상탑 주변에서 펼쳐진 ‘축포야회’(불꽃놀이)를 본 뒤 북한 예술단의 ‘홍루몽’ 공연을 관람했고, 15일에는 김 주석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고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연 환영 연회에 참석했음. 이 자리에는 김도춘 국가관광총국장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 대사도 나왔음.
- 총 395명으로 구성된 중국 측 참관단과 관광단은 지난 12~13일



항공편과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주산중 부국장과 평양 공항에 출영 나온 강철수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은 연설을 통해 “(중국 관광단의) 이번 조선 방문이 두 나라 관광 부문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중앙방송이 전했다.

● 中, 북한 단체관광 시작.. 첫날 395명 방북(4/12)

-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음. 중국 국가여유(관광)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산중(祝善忠)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395명의 관광단이 관광 재개 첫날인 이날 중국을 출발해 평양에 도착, 8일간의 관광을 시작한다고 밝혔음.
- 여유국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광둥(廣東) 등 10개 성·시에서 모인 18팀의 관광단은 베이징과 선양(瀋陽)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단둥(丹東)으로 연결된 육로로 평양에 집결, 단체 관광을 시작함. 국제여행사, 중국여행사, 부너여행사, 강후이(康輝)여행사 등 총 14개 여행사가 모집한 이 여행 상품의 가격은 1인당 5천280위안(86만원)임.
- 관광객들은 평양에서 김일성 광장과 만수대 언덕 및 김일성 동상 등을 둘러본 뒤 개성과 관문점도 방문하고 평양에서 150km 떨어진 묘향산도 관광함. 또 남포항도 둘러볼 계획임.
- 그러나 이번 코스에는 남한 측에 강경 조치를 취해 주목받고 있는 금강산은 포함되지 않았음. 단체관광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노병 24명도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당시 사망한 전우들에게 참배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으로 출발함.
- 북한은 이를 위해 6일 일정의 관광코스에 휴전협정 체결장소인 관문점과 3·8선, 북·중 우호의 탑 방문 등을 포함시켰음. 중국 여행사들은 또 금강산 관광 상품에 대한 예약을 받고 있어 중국인들의 금강산 관광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통청(同程)여유망에 따르면 쑤저우(蘇州)청년여행사는 평양과 개성, 3·8선, 금강산, 원산을 둘러보는 4박5일 일정의 여행 상품의 예약을 오는 17일까지 받고 있음. 광둥성(廣東) 청년여행사도 홈페이지(www.gdql.cc)에 평양, 개성, 휴전선, 금강산, 원산 등을 관광하는 6일짜리 북한 관광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음.
- 중국은 북한 관광에 나서는 자국민들 사이에 도박 열풍이 불자 2006년 2월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했다가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초부터 제한적으로 북한 관광을 허용한 바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 “고교무상화 제외는 심각한 민족차별”(4/18)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가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조총련계 학교)를 고교 학비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민족차별이라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음.
-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는 17일 이 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선인 자녀에 대한 가혹한 심리적 압박이자 고립감을 주는 심각한 민족차별”이라고 비판했음.
- 그는 또 “(조선학교에 대한) 학비 무상화가 이뤄진다면 정권이 바뀌니 새로워졌다는 인식을 갖고, 이쪽(북측)에서도 할 일을 할 수 있다.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과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음. 북한의 대일 정책을 담당하는 송일호 대사는 작년 9월에도 교도통신과 회견을 한바 있음.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데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고교 학비무상화 대상에서 재일 조선학교를 일단 제외했음.

마. 기 타

● 유럽의회에서 다큐 ‘김정일리아’ 상영(04/15)

- 북한의 인권실상을 고발한 영화 ‘김정일리아’가 14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상영됐음. ‘하나의 세계-인권 영화 축제 2010’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유럽의회 건물 내 복합공연장인 ‘예후딘 메뉴힌 스페이스’에서 열린 상영회에는 유럽의회와 인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김정일리아’를 관람했음.
- ‘김정일리아’는 북한에서 ‘김정일화(花)’로 불리며 신성시되는 다년생 꽃 베고니아 개량종의 영문 이름이며 탈북자 13명이 북한의 수용소 실태와 굶주림, 표현의 자유 부재 등 북한사회 전반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증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영화의 감독인 미국의 낸시 하이킨은 이날 상영 전 무대에 올라 “북한 사회와 인권의 실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이 영화는 내가 만들었으나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신변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해 준 탈북자들”이라고 소개했음.
- 국제 기독교 단체 CSW와 공동으로 상영회를 주관한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 (HRWF)의 윌리 포트레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영화만큼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가 없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특히 오는 6월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의 북한 방문 시에도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거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하나의 세계-인권 영화 축제’는 체코에서 시작된 유럽 최대의 인권과 사회 고발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제임. 주로 체코 내의 각 도시에서 출품작들이 상영되지만 유럽연합(EU)이 있는 브뤼셀의 의회와 극장 등에서도 여러 작품이 선보이며 지난해에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소재의 뮤지컬 ‘요덕스토리’ 관련 이야기를 폴란드 감독이 제작한 다큐 영화가 EU 집행위 건물에서 상영됐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한국과 ‘BMD 협력’ 거둬 시사(4/16)

- 미국은 15일 한국과 탄도미사일방어(BMD) 문제를 두고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음.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와 관련한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국제적 협력 확대 방침을 밝혔음.
- 오라일리 국장은 “우리는 현재 20개국 이상과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연구, 분석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폴란드, 체코, 호주, 영국, 독일, 한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음. 그는 “또 폴란드나 루마니아는 우리 이지스함의 정박을 허용하는데 동의했으며, 일본과는 SM-3 2A 요격미사일의 협력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발표한 BMD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BMD체제 참여 관심 표명 국가로 분류하면서 한국의 BMD체제 참여 희망을 공식화한 바 있음. 페피노 드비아소 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국장은 BMD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범위와 수준을 놓고 한미 양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당시 설명했다.
- 한편 브래들리 로버츠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과 관련, “만일 북한이나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의 제한된 보호만을 추구했다면 우리는 현재 이를 갖췄다”면서 “우리는 실전에 배치된 30기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들(북한과 이란)의 ICBM 위협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오라일리 국장은 “북한의 경우 우리가 이미 실시한 (요격) 실험들로 볼 때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지상에서 발사하는 2단계 추진 요격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이라면서 오는 6월 시험 발사할 이 요격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될 경우 북한이나 이란 미사일을 막는데 추가적인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베넷 “전작권 전환시 美증원전력 보장 어려워”>(4/16)

- 미국 랜드연구소의 대북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16일 “전작권 전환이 전환되면 한국에 대한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베넷 박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조찬회동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이같이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역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주국방을 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 베넷 박사는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를 인용, “자원병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이 처음으로 명시됐다”고 언급하고 “자원병 확보가 이 정도로 어려운 만큼 전작권 전환 이후 만에 하나 한국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십만 명의 미군을 파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한국이 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국민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여러 위험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 이번 사고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그러면서도 베넷 박사는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발전했고 핵안보정상회의 등도 개최하는 강국인데 미국에만 안보를 의존하려고 하고 있음. 국방현대화 작업도 애초 계획에 비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 회의 참석자는 “베넷 박사의 주장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미군의 증원전력 보장으로 군사력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배치됐다”면서 “특히 미군이 지원하더라도 육군이 아닌 해·공군 중심이 될 것이라는 베넷 박사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대북억지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美전문가들 “한국 위상·리더십 제고 기회”(4/14)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3일 한국이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데 대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리



- 더십을 높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유치와 관련,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역할, 심화된 한·미 관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견고한 개인적 관계를 두루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인 스트로브 전 과장은 “한국의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는 결국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한미관계를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국제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스트로브 전 과장은 “한국이 다음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의 문제를 좀 더 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혀 차기 핵안보정상회의가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점쳤음.
 -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 소장도 “한국이 다음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국제적인 안보이슈와 관련해 한국의 리더십을 과시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 핵정상회의’는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북한의 현주소와, 북한의 핵개발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장소로 선정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더 확대된 역할을 맡기 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이 한걸음 진전을 뒀음을 의미한다”며 “한국 내에서는 역내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지평을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겠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을 일류국가로 키우기 위한 외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중”이라고 평가했음.
 -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11개월간 도발적인 행동에서 유화공세로 전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이완을 가져왔으나, 한국의 핵정상회담 개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관심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원칙적 합의(4/14)

- 한미 양국이 최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1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한미 양국 실무진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 측의 요청대로 미국 측이 협정 개정 협상에 들어가고, 그것도 가급적 조기



에 개정한다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물밑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개정 협상 착수에 뜬을 들이던 미국 측이 협상 개시는 물론, 더 나아가 조기 개정에 대해서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일단 상당한 진전으로 풀이됨.
- 이는 미국이 주도한 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오는 2012년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기로 하는 등 한미 양국이 신뢰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는 분위기와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특히 1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한미 양국 실무진이 이 같은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해주고 있음. 지난 1974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오는 2014년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연장 또는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임.
- 우리측은 협정 만료인 오는 2012년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평화적 핵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음.
-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변경이나 전용은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용후 핵연료의 국내저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지난해 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수출과 향후 원전 수출의 개척을 위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의 조기 개정은 시급함.
- 미국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는 한국의 원전 수출은 한국과 UAE 모두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임.

● 한·미, 워싱턴서 ‘핵안보정상회의’ 후속협약(4/13)

- 한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 세르파(사전교섭대표) 후속협약을 가짐. 정부 당국자는 14일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국 세르파로서 미측 세르파인 게리 새모어 미 백악관 핵 비확산 담당 보좌관과 만난 뒤 16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 조정관은 이번 협의에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평가하고 그 후속 조치 및 향후 제2차 회의 유치국으로서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 조 조정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위한 우리 측 대표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자 현안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교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협의 결과가 주목됨.

- 한·미 양국은 이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실무 차원에서 2014년까지 개정해야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음. 정부 고위당국자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런 협력이 향후 있을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도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스티븐스 美대사 5.18 행보 ‘관심’>(4/13)

-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일을 한 달여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의 5.18 관련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음. 스티븐스 대사는 13일 광주 방문 이틀째 공식 일정으로 무등 도서관 아메리칸 코너와 설월여고를 방문했음.
- 아메리칸 코너의 자원봉사 사진전 개막식이 이번 광주 방문의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는 전날 공식일정의 첫 순서로 이뤄진 5.18 기념재단 방문의 의미가 조명을 받고 있음. 5.18 기념재단에는 지난해 부대사가 한 차례 찾았을 뿐 주한 미국 대사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임. 스티븐스 대사로서도 2008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뿐임.
- 스티븐스 대사는 윤광장 5.18 기념재단 이사장과 면담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관된 5.18 자료의 공개요청을 받고 가능한 한 협력을 약속했음. 그는 1989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만든 5.18 관련 백서와 1980년 당시 대사를 지낸 윌리엄 글라이스틴의 회고록을 제공하고, 올해 말 기밀이 해제되는 5.18 당시 미국 정부 문서 공개 계획도 소개했음.
- 새로운 사실이 담기지는 않은 문건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티븐스 대사의 성의 있는 답변에 윤 이사장은 “오해를 없애고 서로 발전적 관계로 나가는데 걸림돌을 치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화답했음. 스티븐스 대사는 이 자리에서 윤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30주년 기념식 초청에 대해 미국 대학 강연일정을 이유로 고사하면서도 영상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지난해 5·18을 소재로 한 연극 ‘짬뽕’ 관람 소감을 전해 5·18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음.
- 기념재단 측은 미국 대사의 이 같은 행보를 5·18 이후 ‘광주와 미국’ 사이에 조성된 껄끄러운 분위기를 해소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음. 기념재단 관계자는 “5.18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역할이 빠질 수 없고, 이런 영향 등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반미감정을 없애려는 노력의 하나로 기념재단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음.



- 스티븐스 대사 측은 “이사장으로부터 1년 반쯤 부터 초청을 받아 방문이 성사됐다”며 “스티븐스 대사가 광주에 대한 애착이 많고, 기념재단이 미국의 NGO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 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바이든 “美, 한미FTA 진전에 강력 의지”(4/13)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2일(미국 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진전시킬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 바이든 미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웨스트윙 루스벨트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현재 상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배석했던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료개혁도 통과됐으니 리더십을 발휘해 한미FTA 비준안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미FTA 비준 문제와 관련, “미국은 국익 전체를 보고 해야 한다”,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며 비준을 강력히 요청했다.
- 바이든 미 부통령은 또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백업(Back up: 지원)해주는 것 같다”며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이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 이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핵안보 분야의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선도적 노력을 평가했으며, 바이든 미 부통령은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 측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아이티 지원 등 국제 평화와 안정·재건 지원에 대한 한국 측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 바이든 미 부통령은 이어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 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부통령은 이와 함께 6.25 전쟁 발발 60년을 계기로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과 강화를 도모하고, NPR(핵태세검토보고서)과 관련한 한반도에서의 안보공약 및 대비태세 강화, 대북 전략적 공조, 한미FTA 진전을 위한 공동 노력, 11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다.
- 이 대통령은 바이든 미 부통령에게 한국을 방문토록 초청했고, 바이든 미 부통령은 “꼭 한번 서울에 가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날 바이든 미 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오바마 미 대통령의



페이보리트 (Favorite: 좋아하는 사람)가 오셨음. 오바마 대통령을 행복하게 해줘 고맙다”며 덕담을 건넸음.

- 이 대통령은 바이든 미 부통령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상원에서 당선축하 결의안을 주도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MB “美,국익전체 고려 한미FTA 추진해야”(4/12)

- 이명박(MB) 대통령은 11일(미국 현지시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와 관련, “FTA법안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 국익 전체를 보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FTA란 항상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요인이 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플러스가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양국 경제협력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한국의 중국과의 통상 규모는 미국에 비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의존도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얻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 자유무역주의로의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에 영원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한미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겠나 한다. 우리는 미 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한중FTA 추진과 관련, “양국관계로 봐서는 FTA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영향이 큰 몇몇 특수한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FTA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한중 양국은) 통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마찰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FTA는 한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 이어 “우리는 미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 기구로부터도 협력을 받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원인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보다는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북한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 경제, 주민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정부가 설명하고 실패한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이어 “확실치는 않지만 책임자를 처벌했다고 알려진 것은 주민을 의식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자체가 과거 북한 정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제한적일 것이고 또 6자회담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가 하는 조건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중국도 6자회담국이 서로 합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합의된 범주를 일방적으로 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과거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미국의 NPR(Nuclear Posture Review: 핵태세검토보고서) 발표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점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사전에 전화통화를 통해 미리 전해준 바 있다”며 “NPR 보고서대로라면 북한 등엔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고 한국 국민들에게는 안보 문제에 있어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이나 이란 등의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막는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워싱턴포스트 논설주간인 프레드 하이아트와 인터뷰를 가졌고 워싱턴포스트는 11일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 <李대통령, 미국에 FTA 비준 ‘압박’>(4/12)

-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 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발행된 미 유력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놓고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차원에서 해석을 했다.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실기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임.
-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이 단순한 양국 경제 협력의 차원을 벗어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 “중국은 군사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한미 FTA는 오바마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는 데 달려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나. 우리는 미국 정부, 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설득을 촉구한 셈임. 특히 이 대통령은 미 정부와 의회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을 경계했음. 이 대목 역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임.
 - 이 대통령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로 해서 얻는 것은 잠깐이고 결국은 자유무역주의로의 글로벌 리더십이 미국에 영원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원칙을 이번처럼 강도 높게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이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을 망설인다면 한국과 중국의 FTA가 먼저 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음. 특히 한국은 중국과의 통상규모가 미국과 통상 규모보다 훨씬 크고 향후 중국과의 교역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미국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판단을 주문했음. 이러한 언급 역시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직설적인 톤으로 받아들여짐.
 - 이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 한 나라에 의존도가 크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 교섭 시작은 시간문제”라고도 했음.
 -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이 날짜 칼럼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 요인이 있다”며 “미국의 견제를 위한 그의 바람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유되지만 일부만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음.

● 올해 美영주권 취득한인 100만 명 넘을 듯(4/12)

- 올해 안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미주한국일보는 12일 연방 국토안보부 이민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까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98만 5천904명이라고 전했다.
-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2009년 2만 5천859명, 2008년 2만 6천666명,



2007년 2만 2천405명, 2006년 2만 4천386명, 2005년 2만 6천562명 등 평균 2만여 명임을 고려할 때 2010 회계연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 자료에 따르면 1940년대 83명에 불과했던 영주권 취득 한인은 1950년대 4천845명, 1960년대 2만 7천48명에서 1970·80년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음. 그러나 9.11 사태로 미국의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취업이나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주춤하는 추세임.
- 한편, 2009 회계연도 기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전년보다 6.5% 증가한 1천106명으로 집계됐음. 미국에 입양된 전체 어린이의 11.6%를 차지하며 중국(2천990명), 에티오피아(2천 221명), 르완다(1천580명)에 이어 네 번째임.
- 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총 67명임. 이중 난민 또는 망명 자격을 취득해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인은 절반이 넘는 42명임. 나머지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한·중 관계

● 中 “남북간 화해 협력 지지”(4/13)

- 중국은 최근 금강산 관광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양국의 친구이자 이웃인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추진이 한반도 전체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장 대변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된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향후 6자회담을 전망해 달라는 요구에 “최근 유관 당사국들이 접촉을 강화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각자가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발휘해 6자회담 재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외교가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하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아직까지 그의 방중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日, 김현희 5월 초청 추진”(4/16)

- 일본 정부가 전 북한 공작원인 김현희(48) 씨를 5월에 초청하기로 하고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했음.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장은



이달 하순 한국을 방문, 김 씨의 방일 문제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최종 협의할 방침임.

- 김씨는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과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납북피해자인 요코다(横田) 메구미 씨를 북한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음. 요코다 메구미는 중학교 1학년이던 1977년 11월15일 하교 도중 니가타(新潟)시 자택 부근에서 실종된 뒤 일본 납북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랐음.
- 북한은 2002년 고이즈미 전 총리 방북시 요코다 메구미 납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녀가 1993년 딸을 낳은 직후 숨졌다고 설명했지만 일본은 북한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임.

● 정몽준 “日, 진정한 과거사 청산 이뤄야”(4/15)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피해자가 기억하는 과거와 가해자가 반성하는 과거의 기억이 일치해야 한다”며 “과거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공유해야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진다”고 밝혔음.
- 일본의 여야 지도자 면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게이오 대학에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한일관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말했음.
- 정 대표는 “독도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분명한 한국 영토”라며 “하지만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초등 교과서에 명기하는 것은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비판했음. 그는 이어 “천안함 침몰 사고로 모든 국민이 깊은 슬픔 속에 있는데 일본은 이웃나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한국민에게 이중의 깊은 상처를 줬다”며 “일본에서 국수주의적 정치인과 그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음.
- 정 대표는 또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로 한국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추모 열기가 매우 뜨겁다”며 “하지만 한국의 영웅인 안 의사는 일본에서는 근대화의 거물을 저격한 테러리스트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일본이 이제 국가주의, 제국주의의 눈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평화적 시각에서 과거사를 봤으면 한다”며 “동양평화론자인 안 의사가 원했던 것은 아시아의 평화였고, 아시아 평화의 핵심적 열쇠는 한일 간 진정한 과거청산과 화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대범하게 청산한다면 큰 나라의 품모에 걸맞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보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등을 주문했음. 또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이제 한국은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반도 분단,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있는 한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한일 공동의 과제”라고 역설했음.



- 그는 “양국은 지리적 운명 관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와 인권 등 가치적 동맹 관계로 가야 한다”며 “양국은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한일시대, 아시아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日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와타나베(4/15)

-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회장에 민주당의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 77) 전 중의원 부의장이 취임함. 아사히(朝日)신문은 와타나베 전 중의원 부의장이 모리 요시로(森喜朗, 자민당) 전 총리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 약 200명이 소속된 한일의원연맹 회장에 내정됐다고 15일 보도했음.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은 와타나베 전 중의원 부의장에게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와타나베 씨는 이를 수락했음.
- 와타나베 전 중의원 부의장은 오자와 간사장, 모리 전 총리와 함께 1969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됐음. 모리 전 총리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여당에서 맡는 것이 좋으며 와타나베 씨라면 양보하겠다”고 환영했음. 와타나베 씨는 거침없는 언변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오자와 간사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으로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함.
- 중의원 14선의 와타나베 씨는 특히 일본 정계 최고의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음. 와타나베 씨는 자민당 출신으로 후생상, 통상산업상, 자치상, 국가공안위원장 등을 지냈고 민주당 최고고문을 역임했음.
- 1975년 결성된 한일의원연맹은 일본 국회 내에서 대표적인 의원외교 단체로, 역대 회장은 모리 전 총리를 비롯해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 등 자민당 실력자들이 맡아왔음.

● 정부, LA 독도광고 철폐 日요구에 강력 대응(4/14)

- 정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일본총영사관의 LA 독도 광고판 철폐 요구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음. LA 지역의 한인 사회도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측의 생떼에 다양한 방법으로 맞서기로 했음.
- 주 LA 한국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은 13일(현지시간) ‘일본총영사관의 독도광고 철폐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LA 일본 총영사관의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서한 발송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측에 적절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수 총영사는 "필요하다면 한인사회 단체들과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것이며, 일본총영사관 측과 접촉할 필요가 있는지도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LA한인회와 재미동포독도수호운동본부, 미주광복회 등 10여개 한인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LA한인회관에서 긴급모임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2시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단체장들은 "독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즉흥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꾸준한 독도수호운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앞서 일본총영사관은 LA 근처 고속도로변에 독도 홍보 대형광고를 게재한 재미동포 알렉스 조 씨에게 이달 5일 자로 편지를 보내 일본 외무성의 견해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독도광고를 떼라고 요구했음.

라. 미·중 관계

● 美·中, 환율 시각차..中 절상가능성 열어둬(4/14)

- 중국에 환율절상을 강하게 압박하던 미국이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중국은 환율 절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면서도 절상 가능성은 열어두었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보다 시장지향적인 방향에서 환율에 접근하는 문제를 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지만, 중국이 위안화 절상의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핵 안보정상회의 폐회 기자회견에서 "환율문제에 대해 후 주석과 많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위안화가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점과 더불어 중국이 과거 수년간 시장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온 것은 옳은 결정이라는 내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는 이어 "구체적인 (환율 절상) 일정을 제시받지는 못했지만, 중국이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며 중국 측을 재차 압박했음.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도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뉴스편집인협회 연설에서 환율개혁과 관련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환율에 대한 우려에 답해야한다고 촉구했음.
- 중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외부압력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면서도 위안화 절상 가능성은 열어뒀음. 후 주석을 수행해



- 워싱턴을 방문한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무역 불균형은 위안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외부압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환율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덧붙여 절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후 주석도 12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을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와 시장 상황에 맞게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미국은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저평가된 위안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그동안 중국에 환율 절상을 계속 압박해왔음. 미국의 경제학자와 무역전문가들은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40%가량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 환율 절상을 둘러싸고 고개를 드는 중국 내의 민족주의가 중국 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정치보다 경제문제 보도에서 더 큰 자율성을 가진 중국 언론들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압박을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해석해 중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는 것임. 중국 정부가 환율 절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외부압력은 부당하다’거나 ‘굴복하지 않겠다’와 같은 수사를 동원하는 것도 중국 내부에서 커지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환율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미·중관계, 정상회담으로 ‘해빙’>(4/13)

- 각종 민감한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오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 및 양국 간 각종 갈등의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음.
- 후 주석은 “건강한 양국관계는 양국민의 이익과 세계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중국은 대화와 상호신뢰 강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미국과 함께 양국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후 주석은 이를 위해 서로의 핵심이익과 민감한 문제에서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고위급 교류와 실무협력 심화, 국제적 문제에서의 협력 강화 등 관계 발전을 위한 5가지 목표를 제시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대만과 티베트 등 중국의 민감한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안정,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며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은 영향력이 큰 국가로서 세계평화와 안정 발전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와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건강한 양



국 관계는 양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한다”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장 대변인은 “양국이 서로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는 것이 양국관계 발전의 기초”라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새롭게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이날 회담에 대해 “양국 간 외교관계가 해빙무드를 띠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후 주석은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회담에서 미국과 입장차를 보이던 이란핵 제재 문제와 관련, 외교당국 실무진에게 실행 가능한 제재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음. 이란 핵문제에서 대화와 외교적 노력만을 고집해 온 중국은 13일 대화가 실패하면 제재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투트랙 전략’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음.
- 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와 달라이 라마 접견 문제, 구글 사태, 환율 문제, 무역마찰, 이란 핵제재 문제 등 각종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으나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격차 해소와 위안화 환율 문제 등에서는 눈에 띄는 합의는 없어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됨.
- 후 주석은 “위안화 절상은 양국 무역불균형과 미국의 취업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은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을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필요와 시장 상황에 맞게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이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띄지 않고 주체적으로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 진적으로 절상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읽힘.
- 판강(樊綱)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보아오 포럼에서 “앞으로 1~2개월 내에 위안화 환율이 절상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최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환율 절상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함.
- 미국 역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환율정책보고서 발표시점을 연기한다고 발표해 중국 측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음. 양국 전문가들 역시 양국 관계가 첨예한 갈등을 겪어오던 지난 2월부터 4~5월께 양국 관계가 해빙 무드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해 왔음.
-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더글러스 팔 연구위원은 “4월 미국에서의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의 미·중 전략경제대화, 6월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4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관계 복원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쑨저(孫哲) 칭화(淸華)대학 중미관계 연구센터 주임도 중·미 양



국은 대국적 관점을 중시해 위기 속에서 관계 개선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마. 미·일 관계

● <오바마, 하토야마에 직접 불신감 표시>(4/1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의 비공식 회담에서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문제와 관련, 5월 말 결론이 정말로 가능한 것이냐고 불신감을 직설적으로 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음.
-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에서 열린 핵안전 정상회의 만찬 당시 약 10분간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문제와 관련 “일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에서 현재 노력 중이다. 5월 말까지 결론 내겠다. 대통령의 협조를 원한다”라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총리는 (작년 11월 미일 정상회담 때) ‘나를 믿어달라’ (Trust me)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지 않은가. 깨끗하게 (5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시했음.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 11월의 정상회담 때 한 약속을 하토야마 총리가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깊은 불신감과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해석했음.
- 지금까지 12일 미일 정상회담의 비공식 회담 내용은 하토야마 총리의 발언은 본인의 설명으로 보도된 바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음. 미국 정부는 후텐마 문제에 대한 불신의 표시로 당초 계획됐던 커트 캠벨 국무차관보의 이달 중 방일을 유보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음.
- 이와 관련 미국 측 관계자는 “우리는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후텐마 이전안)을 정부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금 국무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하면 마치 우리가 협의에 응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에 잘못 비쳐질 수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일본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를 하려면 일본 정부가 공식 이전안을 내놓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합의하는 등 국내 교통정리를 마무리한 뒤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라는 뜻임.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지난 14일 존 루스 주일 미국 대사에게 ‘후텐마 이전안 협의를 위한 미일 실무협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존 대사는 전화로 “그럴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음. 한편 산케이신문은 미 정부가 후텐마 이전문제의 5월 결론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후텐마비행장을 계속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할 타이밍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음.
- 미 정부의 이런 방침은 현재의 일본 정부 움직임과 주민 여론을



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별로 바뀐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에 만연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정보기술(IT)의 도움으로 관료사회와 일반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중 가운데 한 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자 “좋은 생각”이라고 흔쾌히 답하기도 했음.

● 미·러, 무기급 플루토늄 감축 서명(4/12)

- 러시아와 미국이 자국이 비축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감축하기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12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음.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양국이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리는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 잉여 무기급 플루토늄 감축 협정에 서명한다”고 밝혔음.
- 천연우라늄이나 농도 2~3%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에 사용할 수 없지만, 우라늄 농도를 2~3%로 높이는 기술을 확보하면 우라늄 농도 90%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우라늄도 생산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우라늄 농축 기술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온 이란이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것도 바로 우라늄 농축 기술 때문임.
- 현재 러시아는 전 세계 저농축 우라늄 시장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한국도 전체 저농축 우라늄의 30%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이고 있음. 이번 협정은 지난 8일 양국 정상이 체코 프라하에서 서명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에 이은 두 번째 비확산 관련 신사협정으로 양국 관계에 또 하나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사. 중·일 관계

● 日, 中군사력 조사 태스크포스 발족(4/18)

- 일본 정부가 최근 군사력을 급속히 확대하는 중국에 대한 정보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일본 정부가 방위성 산하 일본방위연구소(NIDS)에 6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중국 국가안보전략 조사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음.
- 태스크포스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움직이는 전략적 사고, 최근 군사력 강화 목적, 중국 공산당과 군과 관계 등을 연구할 예정임. 일본 정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2~3년 안에 상설 조직으로 확대하는 등 방안을 구상하고 있음.



- 중국의 군사부분 예산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대됐지만 군 병력과 각종 장비 등에 대해선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아 일본 정부는 우려 섞인 시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군사력 강화 목적 등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음.

● “中, 원자바오 방일 철회 검토” (4/18)

- 중국 당국이 일본 정부가 달라이 라마와 ‘세계 위구르 회의’(WUC) 레비아 카디르 의장에게 입국비자를 발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일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18일 보도했음.
- 익명의 소식통은 “현재 중·일 양국이 원 총리의 일본 방문 일정을 협의 중”이라면서 “그러나 일본이 달라이 라마와 카디르 의장에서 비자를 발급할 경우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또 중국 사회과학원의 일본연구소의 부소장을 역임했던 펑 자오쿠이 교수는 “이번 방문은 중·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고 말했음.
-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오는 6월18일 일본을 방문해 나가노(長野)시 소재 사찰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석하고 이시카와와 가나가와 현에서 연설할 예정임.
- 중국 정부에 의해 지난해 7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세계 위구르 회의’의 카디르 의장은 다음 달 20일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를 방문해 여러 심포지엄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중국 정부는 ‘조국 분열주의자’인 두 인물에 대해 비자발급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음. 달라이 라마와 카디르 의장의 이번 일본 방문이 실현되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후 두 번째가 됨.
- 중국 외교부의 마자오취(馬朝旭)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카디르 의장에 대해 비자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그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음.
- 펑 교수는 “일본 내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하토야마 정부가 달라이 라마와 카디르 의장에 대한 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야당으로부터 중국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허가하면 중·일 관계 손상을 우려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中·日, 고속철 안전성 놓고 설전>(4/13)

- 중국과 일본이 중국의 고속철도 안전성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음.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일본 철도운영 회사인 JR도카이(東海)의 가사이 요시유키(葛西敬之) 회장이 중국 고속철도의 안전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중국 철도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고 13일 보도했음. 선제공격은 일본 측이 시작했음.
- 가사이 회장은 지난 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고속철도 기술을 훔쳐 고속철도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정면 비판했음.
- 이에 대해 이번엔 중국 측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철도부 총공정사인 중국공정원 허화우(何華武) 원사는 12일 “중국의 고속철도는 안전성이 보장되며 제어가 가능하다”면서 가사이 회장의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음.
- 허 원사는 “중국 고속철도는 운행시 최대가능속도(380km)보다 낮은 시속 350km의 최고속도로 운행되며 객차 내에서 물이 옆질러 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한다”면서 “중국의 기술은 일본의 것과 다르며 상당수 국가에서 도입을 원할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음. 그는 “일본 측이 이처럼 중국을 비판한 데는 최근 일본이 중국과 국제무대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음.
- 실제로 JR도카이는 미국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측도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간 고속철 건설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음.

아. 일·러 관계

● 일·러 정상, 연내 3차례 영토문제 협의(4/15)

- 일본과 러시아가 연내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영토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이 14일 보도했음.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전 정상회의에 참석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새벽 회담을 갖고 6월부터 11월에 걸쳐 3차례 회동하기로 했음. 하토야마 총리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11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음.
- 9월에는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함. 하토야마 총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3차례 회담을 통해 북방영토(일본 측 표현)에 대한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낸다는 구상임.
- 하지만 러시아는 영토 문제에 대한 대화는 피하지 않겠지만 일본



측의 영토 반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영토’는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에토로후(擇捉), 쿠나시리(國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齒舞) 등 4개 섬으로 국제적으로 쿠릴열도로 통합.

- 1855년 모다 조약을 통해 일본이 차지한 이래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점령함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4개 섬은 일본령으로 인식돼왔으나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 소련이 자국 영토로 지배해왔음.
- 일본은 집요하게 러시아에 이들 섬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국제법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고 있음.

자. 기 타

● 외신, 한국 2차 핵정상회의 유치 긴급타전(4/14)

- 전세계 주요 외신들은 13일 한국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된 사실을 긴급뉴스로 타전했음. 특히 외신들은 2012년 한국에서 차기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기로 한 것은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신호라는 분석을 내놓았음.
- AFP통신은 이날 핵안보정상회의 1세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의 차기 회의 유치사실이 발표됐다고 전하면서 이는 북한의 핵도전에 대한 은연중의 비난이라고 지적했음.
- 로이터통신도 차기 회의의 한국유치는 역내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 회의 1세션 앞부분을 생중계한 CNN방송 진행자와 대담자는 한국 유치사실이 발표되자 오바마 대통령의 오른쪽 옆자리에 이명박 대통령이 앉은 이유가 밝혀졌다면서 이번 회의 유치는 한국이 비확산이라는 중요한 문제의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음. CNN은 이에 앞서 회의시작 직전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옆자리에 앉아 한동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생방송하기도 했음.
-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국이 2012년 차기 핵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됐다”고 긴급뉴스로 타전했고, 중국의 신화통신도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제2차 핵정상회의 유치를 발표했다고 신속 보도했음.

● 中·러, 對이란 에너지 신규투자 금지 난색(4/13)

- 이란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P5+1) 등 주요 6개국 이 지난주 새 제재안 초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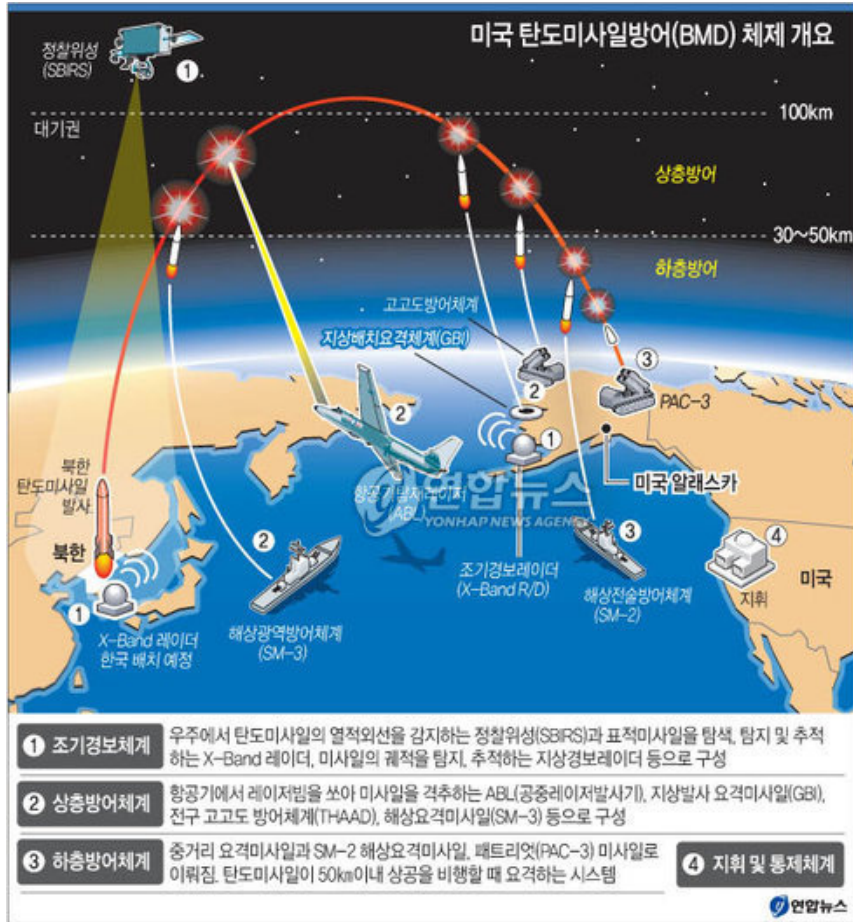


미국 측 제재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 이 때문에 미국과 독일 등은 제4차 제재안을 이번 달 안에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제재안 마련을 둘러싼 협상이 적어도 6월까지의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미국과 나머지 4개국에 새 유엔제재안으로 제시된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안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12일 보도했음.
- 로이터는 익명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중국의 리바오둥 유엔주재 대사가 지난 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과 3시간 동안 개최한 회의에서 이 같은 새 제재안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미국 측의 제재안 초안 자체를 논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 한 외교관은 이와 관련, “중국이 에너지 제재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됐음.
- 미국 측이 제시한 새 이란제재안은 이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금지 조치를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이란의 석유와 가스산업에 대한 수입이나 수출규제 요구는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외교관들은 전했다. 이와 함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이 같은 이란의 에너지 규제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시했음.
- 새 제재안이 러시아가 현재 건설 중인 이란 부셰르 원자로 건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너지제재)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반이 제재 안에 찬성하고 나머지 반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제재의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해 미국 측의 대(對)이란 에너지 신규투자 금지안 채택을 원치 않고 있음을 시사했음.
- 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출발하기에 앞서 이란에 한 제재안 마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관들은 미국과 유럽 대표들은 대이란 제재안이 이번 달에 채택되길 바라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기에 앞서 징벌적인 조치를 완화하길 위해 협상이 적어도 6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음.



[참고 1] <그래픽>미국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개요(4/16)



반중빈 기자 bjb@yna.co.kr / 20100203

(서울=연합뉴스) 반중빈 기자 = 미국 국방부가 3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나서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bjbin@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4/16/0511000000AKR20100416041400071.HTML?audio=Y>